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 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승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with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백인길 이사장)
- 문의 : 도시개혁센터(김성달 국장, 윤은주 간사, 02-3673-2146/dongi78@ccej.or.kr)
- 시행 : 2021. 4. 28.(총 10매)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은 시민 대신 관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인가? 약속 뒤집고, 토간행정 일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 무리한 공사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오 시장, 2009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다시 잘못된 결정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
- 취지발언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 규탄발언1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 규탄발언2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규탄발언3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질의답변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 원상 복구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 발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우선 원상 복구하는 방안은 최소 4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쓴 돈이 250억원인데, 원상복구에 15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250억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 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이다.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한다. 그리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 재검토는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첫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한다. 둘째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 셋째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하겠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지 않았다. 또 광장 조성의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다. 오직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랬듯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결정만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오 시장의 이런 일방적 결정은 결국 오 시장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를 반복”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 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또 개선하거나 늘리겠다고 밝힌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니라, 철거가 타당하다. 광장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장 주변과 연계 활성화하는 내용 역시 공허하다.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걸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란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서울시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누구에게서 비롯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 800억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

심지어 오 시장은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행정기관 결정은 시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평범한 민주주의 원리마저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 기관이 결정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인가. 일방적이고 지속불가능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해 ‘소모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꼴이다.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

우리는 오늘 전 시장의 유고로 재등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광화문광장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협의도, 단 한 차례의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광장으로 만들

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려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 공무원들을 먼저 문책해야 한다. 그래야 그 광장에 대해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끝”

별첨1. 시민사회단체가 3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발송한 질의서 답변(원본)

별첨2. 경실련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원본) 광화문광장 부분

별첨3. 경실련 정책과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동의 답변서(원본)

별첨4. 오세훈 시장 후보시절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머니투데이 2021.3.31.)

별첨5.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 비판 입장 언론기사(국민일보 2020.11.17.)

2021년 4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답변입니다.

1. 후보자께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

1) 찬성한다 2)반대한다 3)모르겠다

2.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과 관련해, 5월로 예정된 서쪽 광장 조성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시겠습니까? (1)

1)공론화를 재개하겠다 2)공론화를 재개하지 않겠다 3)모르겠다

3. 후보자께서는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하시겠습니까? (1)

1)그렇게 하겠다 2)그렇게 하지 않겠다 3)모르겠다

4. 그 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광화문광장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공적공간입니다.

현재 기능상, 도시미관상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서울시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시민불편을 초래해가며 재구조화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故박원순 시장도 지난해 5월 전면 재논의를 선언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저는 지난 서울시장 재임시절 처음 광화문광장을 만들 때도 시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시장을 해본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강행중인 공사의 전면적인 중단으로 초래되는 또다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좀더 의미있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족한 공론화과정을 마무리하여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추가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북권에서 서남권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 임기중 시작한 월드컵대교는 당초 2015년 완공목표였으나 박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티스푼예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사중에 있으며, 2022년에 완공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12년9개월로서 교량공사로는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할거라고 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초래한 사업비 증가가 무려 1,461억원입니다. (당초 2,589억원 → 변경 4,050억원). 다리 하나를 더 건설해도 될만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이처럼 티스푼예산을 배정하며 하염없이 시간만 끌던 서울시가, 시장도 없는 대행체제에서 800억원이라는 혈세를 집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저런 통크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취임 즉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실련 정책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

2021. 3. 25.(목)



서울특별시

부동산·도시

11. 졸속·토건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 논의가능

- ▶ 무리하게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시민 편익을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경실련 정책과제 동의 답변서

경실련 5대 분야 17개 정책과제	동의 여부		
	○	△	×
민생안정			
1.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		
2.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	✓		
3. 저소득층 월평균 20만 원 이상 주거비 지원	✓		
4.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	✓		
자치분권			
5.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
6.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제 도입	✓		
7.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민관혁신시스템 구축	✓		
부동산·도시			
8.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공개	✓		
9.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확충	✓		
10. 민간의 싹쓸이식 재개발·재건축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11. 졸속·토건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		
1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
의료·복지			
13. 취약계층(아동 및 노인 등) 지역 돌봄 안전망 구축	✓		
14. 공공의료 확대위한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충	✓		
15.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		
16.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		
시민사회			
17.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실현	✓		

롯데 "광화문광장, 승효상의 '노욕'... 공사중단 '갈등 중'"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이상섭 기자

VIEW : 6748 | 2021.03.31 13:4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113175381419&type=1>

기사주소 복사



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초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승효상(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노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사업 중단 여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오 후보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사 구간 일부에서 조선시대 유물,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진척 안 되고 있다"며 "시장 권한대행이 시작해선 안 됐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놴다. 승 전 위원장은 재구조화 공모전 심사위원장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총괄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이건 한 건축가의 노욕이다. 승효상 이 분의 실명을 써도 좋다"며 "이 분이 박원순 시장의 멘토 역할을 했다. 개인적 욕심이다"라고 비판했다.

승 전 위원장이 재구조화 사업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 의혹도 제기했다. 오 후보는 "(승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학연이 있다. 국가건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도 취임했다"라며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 성격을 보면 이런 무리한 공사를 착공할 분이 아니다"라며 "한 건축가의 노욕이 뒤에 그림자처럼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물론 틀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당선 시 사업 중단을 단행할지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오 후보는 "이 분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 있는 광장을 자기 뜻대로 고치려 하는 건 옳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것이라도 일단 시작됐으면 존중한다는 저의 자제력과 행정 존중 마음 때문에 갈등 중"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공사에 목소리 내는 주자들...오세훈 합세

안철수 “무리한 공사 강행과 혈세 낭비”

입력 2020-11-17 19:48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정비 공사 방침에 여야 대권 주자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도 모른다.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한 건축가의 고집 뿐”이라며 “거기에 791억의 세금이 쓰인다. 코로나로 가뜰이나 국민이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건축가가 본인의 제안을 관철하고픈 욕망에 광화문광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길 바란다. 전 시장도 올해 5월 전면 재논의를 선언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행여 이 모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동기동창이자, 지난 9년간 박원순 시장의 도시건축 행정을 좌지우지했다고 회자되는 한 사람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에서 비롯됐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을 아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거의 모든 매체와 시민사회에 의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월권을 성토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대표도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해 “현 대행체제가 명분 없이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서울시장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 강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